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65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. 27.

발 의 자 : 민형배 · 황운하 · 김성주
문정복 · 박상혁 · 양정숙
강득구 · 최종윤 · 김홍걸
이수잔^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산림 보호를 위해 남겨둔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소유자가 벌채할 때, 생태·경관·재해위험을 최소화를 위해, 통상 벌채면적의 30% 수준을 잔존시키는 것으로 분석합니다.

산림소유자들이 스스로 벌채면적을 자제하는데, 제도가 뒤처집니다. 현재 시행규칙은 산림에서 벌채 구역 면적이 5ha 이상이면 벌채면적의 10% 이상을 남기도록 할 뿐, 잔존산림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.

산림소유자가 공익을 위해 면적의 10% 이상을 벌채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, 남겨진 목재의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 합당합니다.

이에 잔존시킨 입목가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

산림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목재수확제도에 기여하기
위한 것입니다(안 제36조제4항 등).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, “제8항”을 “제9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9항”을 “제10항”으로 한다.

- 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생태·경관·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 벌채 구역에 남겨진 입목가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</p> <p>제36조(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생태·경관·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 벌채 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·⑥ (생략)</p> <p>⑦ <u>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</u></p>	<p>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</p> <p>제36조(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생태·경관·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 벌채 구역에 남겨진 입목가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·⑥ (생략)</p> <p>⑦ ----- ----- -----제6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.

⑧ 제1항,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,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.

⑨ 제1항,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(作業路) 설치에 관하여 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
⑩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,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

-----.

⑧ -----제5항

-----.

⑨ -----제5항

-----.

⑩ -----

-----제5항-----

<p>지와 제8항에 따른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가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인·점검하여야 한다.</p> <p>⑪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9항에 따른 확인·점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-----제9항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⑪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제10항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